

한국에서의 '미소금융'의 현황; 신용공급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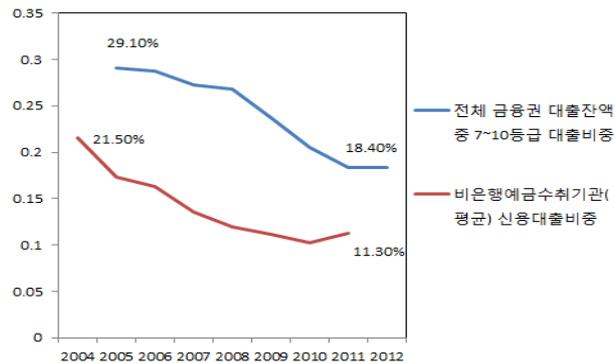
김명록(경성대 상경대 경제금융물류학부)

I. 서론

1976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빈곤층 자활을 위해서 무담보소액대출 프로젝트를 실시한 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 크레딧을 후진국의 지역 개발과 빈곤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그라민 은행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 기준 5.5백만 조합원을 가진 거대 금융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개발 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이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 기준 전 세계 100이상의 국가들에서 1,000~2,500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들이 67.6 백만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Sengupta and Aubuchon, 2008).

마이크로 크레딧은 한국에서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IMF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확립과 2008년 경제위기와 뒤이은 침체국면 동안, 한국사회는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 저성장, 고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민들, 특히 7등급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시장으로부터 배제현상이 심각해졌다. 특히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권 전체 대출 중 7~10등급에 대한 대출비중이 급감하였으며, 서민금융기관으로 알려진 신협, 새마을 금고 등 비은행예금수취 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림1] 금융기관별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대출 현황(%)



출처: 오윤해(2013), p15; 금융감독원 은행경영자료

금융기관들이 이들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의 대부업체 이용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급속히 증가되었다.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007년 약 89만 명에서 2010년 247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출금액 역시 같은 기간 약 4조 1천억 원에서 8조 6천억 원으로 상승하였다(한국금융연구원(2012),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참고).

서민금융이 위축되면서 해외 마이크로 크레딧의 사례들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

다. 초기에는 민간단체가 민간기부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00년 신나는 조합, 2002년 사회연대은행 창립 등이다. 뒤이어 서민금융과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정부부처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2005년 희망키움뱅크, 20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3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들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와 같은 구조¹⁾를 갖게 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소액서민금융재단의 확대하여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 설립하였으며, 2010년 서민금융기관에서 보증부 상품인 햇살론 출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새희망홀씨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실시하였다. 2013년 이후 서민금융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제도 개편이 있었으며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하나인 미소금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미소금융은 마이크로 크레딧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2009년 이후 진행된 미소금융은 2014년까지 1조 2천억 원(약 13만 건)의 대출을 하여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차입자들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부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2013년 기준 약 7%) 추가적인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해외의 마이크로 크레딧의 흐름을 살펴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마이크로파이낸싱의 초기 형태는 정부자금이나 기부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NGO형식(donor-supported non-profit NGOs)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점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고 상업화된 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들은 점점 NGO 형태에서 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변형되고 있다(Lutzenkirchen and Weistroffer, 2012, p4). 이러한 세계적인 진화과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 미소금융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현재 기금의 고갈 및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미소금융에게 변화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미소금융의 현황을 (1)사회적 또는 정책적 기능인 신용공급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 (2)기금의 지속가능성 또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3)상업적인 측면과 사회적 기능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해외 마이크로 크레딧의 변화과정을 교훈삼아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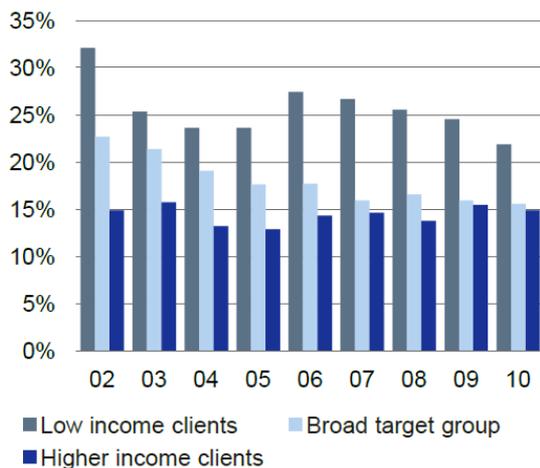
7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제공 문제가 금융시장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액거래에서 발생하는 많은 거래비용 때문이다. 이미 많은 이론들이 금융에서의 정보의 의미와 거래비용, 그리고 이자율과 신용할당과 관련된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Stiglitz and Weiss, 1981; Manove, Padilla, and Pagano, 2001).

저소득층의 경우 부도율이 높고 신용거래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의 정보가치 역시 비용에 비하여 보잘 것 없다. 모든 대출은 선별-사후관리-원리금 회수의 전 과정에 일정한 비용이 요구한다. 소액대출에도 기본적으로 정보취득비용, 관리비용, 회수비용 등의 비용이 동일하게 들어

1)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서민금융상품지원과 서민들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서민금융상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민금융상품지원에는 바퀴드림론도 포함된다.

가므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더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불규칙성이 높고 정보량이 부족하여 정보취득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원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기관은 서민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기피하게 된다.

[그림2] 차입자의 소득별 운영비 비율



Sources: MIX Market, DB Research

출처: Lutzenkirchen and Weistroffer, 2012, p5

금융기관의 비용은 크게 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 그리고 부도에 따른 손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수익결정과 대출이자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마이크로 크레딧의 경우 운영비가 핵심적인 변수이다. 이는 mix²⁾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운영비가 약 19%에 이르러 약 27%의 대출이자율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높아지므로 이들에 대한 대출은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대출이자율로 충당하고자 한다면, 우수한 고객을 모두 빠져 나가게 되고 일부 저신용자가 주요 고객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들에 대한 높은 이자율은 다시 높은 부도율을 야기시킨다. III에서 살펴보겠지만 부도율이 높을 경우 생존 차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율은 부도율과 운영비 비율과 자금조달비 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실현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

1980년대 해외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들은 기부금에만 의존하는 초기 형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업적인 은행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직접 마이크로 크레딧 영업을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기존의 비영리 금융기관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마이크로 크레딧의 상업화(coomercialization of micro-creidt)라고 한다. 이러한 상업화는 부자들과 도시지역으로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집단대출에서 개별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시키는 등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상업적인 관점에 충실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본연의

2)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조직이 수집한 세계 각국의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들의 재무정보 자료.

기능인 사회적 기능, 즉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정부주도 및 기부금에 의존한 NGO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Lutzenkirchen and Weistroffer(2012)은 2009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과거 상업적으로 변신한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들이 도리어 수익성을 높이지 못하였으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공급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산성장률을 급격하게 높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신규 차입자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저신용자 중에서 위험이 적은 사람을 찾는 데 실패할 수 있고 직원들이 임금과 ROA를 높이기 위해서 신중하지 못한 대출을 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영석·이기영(2013)은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사례를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신용문제가 시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신용을 제공하는 것보다 상업적인 원칙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음을 1980년대 이후 마이크로 크레딧의 상업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서 마이크로 크레딧의 ROA는 일반은행보다 나쁘지 않았으며, 영업수익과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운영비용을 비교해서 측정한 운영자립도가 100%를 상회하여 양호한 수준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보조금을 자금시장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재정자립도 역시 100%를 상회하여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을 통한 차입을 통해서도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Lutzenkirchen and Weistroffer(2012)의 주장처럼 상업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의 부자들에게 대한 대출만 증가되거나 최근 한국의 서민금융기관들처럼 안전한 대출을 위해 담보대출에 집중한다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은 기존 시중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이 높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고리대 기관으로 변모할 수도 있게 된다. 실제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대표적인 형태인 그라민 은행에 대해서도, ‘가난한 공동체를 영원한 빚더미로 몰아넣었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결국 금융상품을 파는 자본가들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신명호, 2008).

결국 이윤과 지속가능성에만 초점을 둔 상업화의 과정은, 저신용자 대출에 수반되는 높은 운영비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운영비를 회피하여 일반적인 은행처럼 변화할 가능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고리대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의 과정은 서민금융을 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의 과정은 약탈적 서민금융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은 저신용자들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신용제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는 미소금융은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다음 III에서 한국의 미소금융을 신용공급의 차원에서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현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III. 한국의 미소금융의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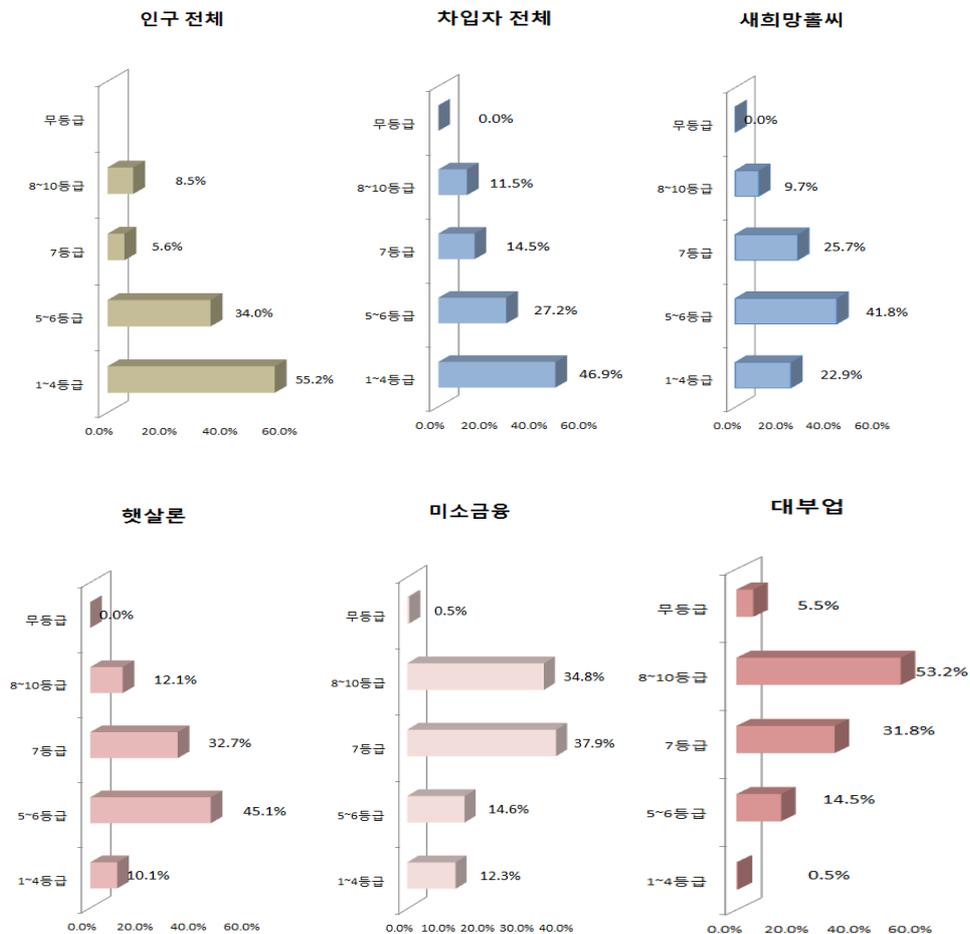
4.1. 신용공급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자영업의 증가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시중은행과 서민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을 통한 신용공급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 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가구 중 22.6%는 일부만을, 그리고 5.9%는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대출받기를 포기한 이들은 처음부터 은행에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의 신용계약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결국 이들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문제는 특히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이른바 3대 서민금융대출 상품들이 도입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정치권에서 금융권을 압박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분히 정책적 성격을 가진다. 먼저 금융권의 사회적 책무이라고 할 수 있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공급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그림3]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비교



출처: 오윤해(2013) 표5-1, 표5-2, 표5-3 참고(2011년 기준),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 표 I-7 참고(2011년 기준), 금융감독원 2014년 대부업체 실태조사

위의 그림들은 순서대로 인구전체의 신용등급, 전체 대출보유 차입자의 신용등급별,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용등급별, 햇살론 대출의 신용등급별, 미소금융 대출의 신용등급별, 그리고 대부업체 대출의 신용등급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전체를 보면, 1~6등급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5%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은 대출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대출을 비교해보면 1~4등급의 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3대 서민금융대출을 비교해보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와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의 경우 모두 5~6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와 반대로 미소금융은 7등급과 8~10등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3대 서민금융대출³⁾ 중 미소금융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소금융의 신용공급기능은 대부업체와 중복된다. 2014년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대부업체의 7등급 이하 차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이 거의 80%에 이르러 미소금융의 차입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3대 서민금융대출제도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소금융이 대부업체를 대체하는 기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4]를 보면 200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던 대부업의 대출액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춤하였다가, 그 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급격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6월에는 8조 6천억 원에 육박하였다가 이후 성장세가 주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민금융의 정책적인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물론 2011년 6월에 있었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44%→39%)의 효과 역시 반영되었음. 이러

3) [표1] 3대 서민금융상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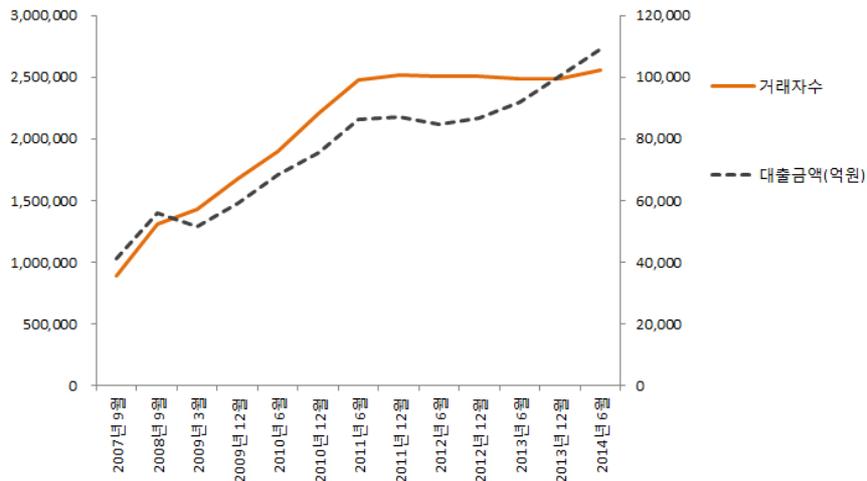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창업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자(6~10등급) 저소득층(연 2,600만원 이하) 창업 및 생계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자(5등급 이하) 저소득층(연소득 3,000만원 이하)
금리	4.5%를 기본으로 함	8~10%	9.7%를 평균으로 함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면예금(7,833억원) 기부금(9,587억원) 단, 2013년 기준 	서민금융기관 출연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이용한 보증제공	은행 자체 재원 (가장 규모가 큼)
비금융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전 위탁컨설팅(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자를 통한 컨설팅지원(미소희망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전 12시간 위탁교육(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없음. (신청기준 및 내부신용등급을 이용한 대출 승인)
운용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소금융중앙재단 총괄 하 세가지 경로 중앙재단지역지점 기업 및 은행 지점 복지사업자 	서민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

출처: 오윤해(2013); 정영석·이기영(2013)

한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량경제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미시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분석이 힘들). 왜냐하면 2013년 6월까지 미소금융은 0.9억 원, 햇살론은 3.3조 원, 새희망홀씨 대출은 7.2조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 총 11.4조원의 대출실적을 보였다. 이는 대부업체의 대출규모인 8조 6천억 원보다 큰 규모이다.

그리고 서민금융의 대출실적을 건수별로 집계하면, 2014년까지의 누계 건수는 미소금융이 약 13만 건, 햇살론이 약 56만 건, 새희망홀씨가 약 65만 건으로 합계 134만 건 정도 된다. 약 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 중, 대부업체가 약 247만 명을 흡수하고 서민금융대출제도에서 약 134만 명과 거래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2014), 서민금융정책의 방향(2010), 대부업실태조사결과(2014) 참조). 따라서 대출액이나 대출 건수로 본다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가 대부업체를 대체하여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미소금융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반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자영업자의 대출 비율이 각각 22.8%, 11.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소금융이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공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한국금융연구원(2012), 표 I-24).

[그림4] 대부업체의 거래자수(왼쪽) 및 대출금액(오른쪽) 현황



출처: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한국금융연구원, 20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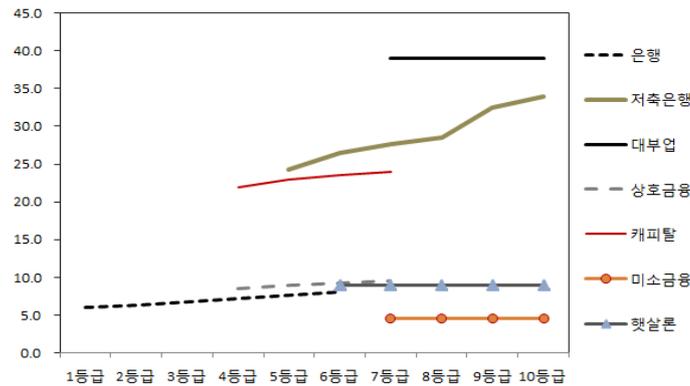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대출제도의 역할을 좀 더 평가해보기 위해서 신용시장의 다양한 이자율을 살펴보자. 대출이자율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단절과 서민들의 금융적 접근성에 대한 평가근거가 되기도 한다.

서민금융대출제도가 저신용자들의 신용접근을 용의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민금융의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우량 신용의 가장 낮은 단계인 4등급과 저신용의 가장 높은 단계인 7등급에게 적용되는 금리 격차를 의미하는 단층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집단 내에서도 차별적인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는 일종의 시장실패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가격(이자율)이 초과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 결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에 성공적으로 접근한 일부 차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그리고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림5]는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상호금융,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신용등급별 금리를 표시한 것이다. 은행의 경우 7~10등급의 고객들에게 신용대출을 일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전성 지표에 대한 감독지침 등의 영향으로 인해 7등급 이하 대출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6등급의 차입자들에게 적용하는 대출이자율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미소금융은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들에게 적용하는 대출이자율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각각의 금융기관들의 주요 차입자 집단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그림5]를 통해 살펴보자.

[그림5] 금융기관별 주 차입자들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이자율 현황(%)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4),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경제콘서트 p101
박창균(2013)⁴⁾ 참고로 재구성함.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5등급의 차입자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로 간다면 갑자기 아주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또한 8등급의 차입자가 저축은행에서의 대출에 실패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받아야 할 경우, 역시 대출이자율의 단절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용할당에 의해서 발생한 단층현상이다.

동일한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차입자라고 할지라도 금융기관의 신용할당에 의해, 대출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대출을 받지 못한 차입자는 훨씬 더 불리한 조건으로 다음 단계의 신용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신용시장은 갑자기 높은 이자율을 적용시킨다. 왜냐하면 신용시장이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신용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위 신용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경우 협상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층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단층현상은 신용할당과 금융시장의 구조적 단절의 결과이며 시장실패

4) 박창균(2013)의 표 참조

금융회사별 개인 신용대출 분포

(단위: %)

신용 등급	은행	상호금융	여전	저축은행	대부업
1~6 등급	91.42	76.39	70.72	35.89	13.27
1~3 등급	58.19	20.81	18.64	0.44	0.01
4~6 등급	33.24	55.57	52.08	35.45	13.26
7~10 등급	8.58	23.61	29.28	64.11	86.73

주: 1) 2012년 4월말 잔액 기준
2) 상호금융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형 금융사를 의미
자료: NICE 신용평가정보

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의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미소금융은 분명히 시장실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 정책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이자율은 시장과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다. 이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장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복지적인 성격의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금융적 제약을 완화시켜 자활의지를 높이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이자율과의 이렇게 큰 이자율 격차는, 적어도 미소금융의 신용공급에 의해 저신용자들의 시장이자율 전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정치적 형태)의 신용할당이라고 할 수 있다. 미소금융이 정책적 효과는 다른 금융시장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좀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미소금융의 대출이자율의 복지정책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미소금융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미 휴면예금과 기부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히 사회적 합의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2. 지속가능성 및 상업적 관점에서의 접근

그렇다면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의 보증제도,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과 기업체의 기부금의 도움을 받아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자수익으로 대손비용과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소금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다시 이끌어낼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제도, 휴면예금, 기부금이 유지되지 않고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리고 이자수익으로 대손비용과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소금융의 지속가능성은 사라진다.

미소의 지속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가능하다. 먼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금 운영 자체의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기금운영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미치는 부정적인 압력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정치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미소금융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지속의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소금융의 정치적 성격의 출발에서부터 비롯된 지속가능성의 부재는 미소금융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2013년 9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구상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2015년 4월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미소금융기금이 지속적으로 모아질 수 있는가에 있다. 아직 2012년 8월 23일 휴면예금⁵⁾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서 은행들의 휴면예금의 출현이 불가능해졌다. 아래의 [표2]를 통해 미소금융 재원조성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5) '휴면예금법 제2조 제3호: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은행은 더 이상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예금을 출현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은행의 휴면예금 출현은 없게 되었다.

[표2] 미소금융 제원조성 현황(2013년 6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휴면 예금	은행권	1,766.4	894.1	657.4	641.2	570.4	0	4,529.5
	상호저축은행	18.5	3.2	2.1	1.2	1.6	0.5	27.1
	소계	1,784.9	897.3	659.5	642.4	572.0	0.5	4,556.6
휴면 보험	생보사	705.3	246.8	329.1	412.4	466.7	442.0	2,602.3
	손보사	213.9	96	87.4	107.2	132.4	132.7	769.6
	소계	919.2	342.8	416.5	519.6	599.1	574.7	3,371.9
기부금	6대 기업	0	1,050	1,000	1000	865	85.0	4,000.0
	5대 은행	0	440	490	830	440	100.0	2,300.0
	부실채권정리기금	0	533.8	1,384.9	475.2	161.1	0.0	2,555.0
	기타 기부금 등*	0	275.7	302.3	76.6	177.3**	0.0	831.9
	소계	0	2,299.5	3,177.2	2,381.8	1,643.4	185.0	9,686.9
계	2,704.1	3,539.6	4,253.2	3,543.8	2,814.5	760.2	17,615.4	

* 10년 9월 SK 넷모바일 현물 기부 1억9천만원 미포함/2012년 10월 SK루브리컨즈 현물 기부 0.4억원 미포함
 ** 청년 고금리 전환대출 기부금 100억 포함

출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2013, 9,11)

기금출연은 목표액인 2조 2천억 원에 도달하지 않았다. 앞으로 기금의 확보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확보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상업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외 마이크로 크레딧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을 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Dieckmann(2007)).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경영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은행출연금으로 인한 자산의 크기는 2012년 이후 조금씩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자산은 2013년 1조 1,692억원에서 2014년 1조 1,21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추가적인 재원이 조달되는 것보다 운영과정에서 경비발생으로 소진되는 자산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미소금융의 휴면예금과 기부금으로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을 제외하고 대출 자산의 부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비와 대출 및 사후 관리 등과 관련된 운영비 발생한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이자수익은 276억원이고 비용은 208억원으로 경영공시자료에 나와 있다. 이것만 보면 이자수익으로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비용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액(대손상각비)을 포함시켰는데, 문제는 2014년의 7% 정도의 부도율에 합당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한다. 수익성의 문제는 대출이자율의 설정, 운영비와 대손상각비, 적정한 마진을 등과 연결되므로, 이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출이자율은 자금조달비용 + 손실원금 및 이자보상액 + 일반관리비 + 마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금융기관마다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공식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 단순한 모형을 통해서 균형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text{식1) } A \times (1-d) \times (1+r^l) = (1+r^c + c + m) \times A$$

단, A: 대출금, d: 부도율, r^l: 대출이자율, r^c: 자금조달비용, c: 일반관리비, m: 마진율

이 식을 정리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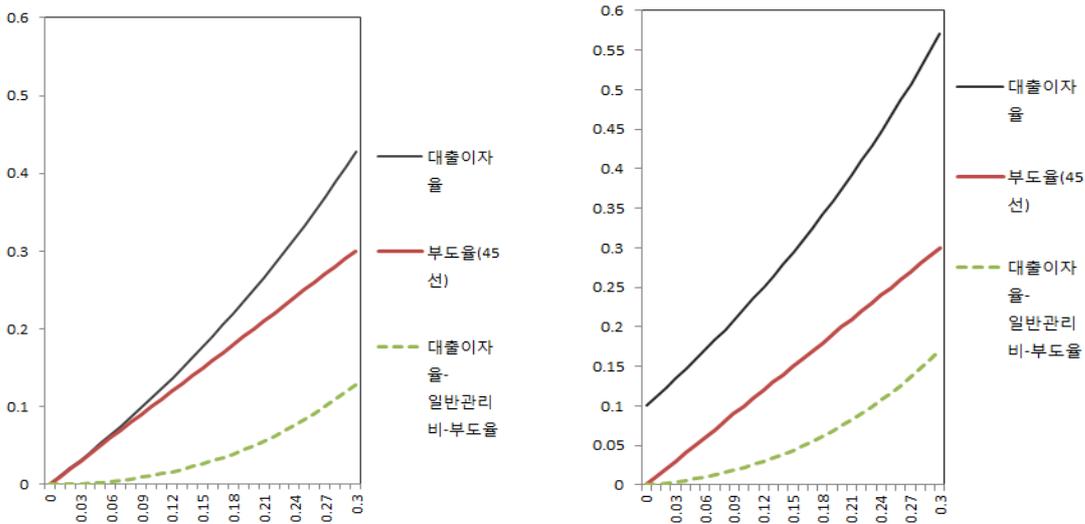
$$\text{식2) } r^l = \frac{1+r^c+c+m}{1-d} - 1 = \frac{r^c+c+m+d}{1-d}$$

가 된다.

이 식의 분자는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분모는 이를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살아남은 차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만약 부도율이 높아지면, 남아있는 차입자에게 돌아가는 대출이자율이 부도율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대출이자율이 일반관리비나 자금조달비용, 마진율(이 논문에서는 ROA로 간주하고자 함)이 높을 경우 더 가파르게⁶⁾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의 점선(대출이자율과 부도율의 차이)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는 30%의 부도율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관리비(와 마진율) 등이 전혀 없는 경우 42.8%의 대출이자율이 책정되고, 일반관리비(10%)를 설정한 경우 57.1%의 대출이자율이 책정된다. 30%의 부도율 보다 높은 대출이자율이 결정되는 이유는 부실대출자산을 70%의 생존 차입자들이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이고, 42.8%와 57.1%의 차이인 14%의 대출이자율은 모두 일반관리비를 70%의 생존 차입자에게 분배한 결과이다.

[그림6] 부도율과 일반관리비를 가정한 대출이자율의 시뮬레이션



설명: 왼쪽 그림은 일반관리비(c)을 0으로 설정한 경우이고 오른쪽 그림은 c를 10%로 가정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의 연체율과 자산수익률(ROA), 대출이자율과 자금조달비용, 운영비를 실제 살펴보자. 아래 [표2]에서 우리는 해외 마이크로 피이낸싱 금융기관들, 한국의 대부업체, 한국 미소금융, 한국의 일반은행들의 주요 지표를 비교한다.

[표2] 금융기관별 주요 지표 비교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	자금조달 비용	운영비 (추정 또는 실제)	자산수익률 (추정 또는 실제)	90일 연체율
------	-----------	------------	-------------------	---------------------	------------

6) $\frac{\partial}{\partial c} \left[\frac{\partial(r^l - d)}{\partial d} \right] > 0$, $\frac{\partial}{\partial m} \left[\frac{\partial(r^l - d)}{\partial d} \right] > 0$.

해외 마이크로파이낸싱 전체	26.8%	5.1%	19.5%	0.0%	5.1%
해외 은행형 마이크로 파이낸싱	23.4%	5.0%	14.8%	1.2%	5.4%
해외 ngo형 마이크로 파이낸싱	28.3%	4.7%	23.1%	-1.4%	5.0%
한국 대부업 (2013년 기준)	34.7%	8.4%	10.4%(추정)	4.5%	8.4%
한국 미소금융 (2013년 기준)	4.5%	0.0%	3.65%	-6.56%(추정)	7.1%
한국 은행업 (2013년 기준)	5.9%	2.8%	1.6%	0.3%	0.7%

설명: 해외 마이크로 파이낸싱 자료는 14,678의 관측치 자료임. 기간은 2006-2013년까지이며 패널 자료.

한국 대부업 자료는 2013년 기준 자료임(대출이자율은 개인신용을 중심으로 한 것임, roa 역시 당기순이익을 개인신용대출로 나눈 것임). 한국 대부업의 추정 운영비는 위 식2)를 통해서 구한 것임.

한국 미소금융의 roa는 위 식1)을 이용하여 추정된 것임. 미소금융의 운영비는 대표적인 지점의 경영공시자료를 참조하여 평균을 구한 것임.

출처: mix data 및 금융감독원 은행경영자료,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자료

은행의 경우 신용이 우수한 고객에게 대출을 실시하므로 운영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연체율 역시 아주 낮다. 해외 마이크로 파이낸싱 금융기관은 모두 운영비가 아주 높고, 이 운영비가 대출이자율의 결정에 핵심적이다.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함으로써 연체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 대부업의 경우,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것의 반대급부로 연체율이 아주 높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한국의 미소금융은 운영비 지출이 아주 작으며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연체율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미소금융의 ROA를 추정해보면 아주 심각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연체율, 대출이자율, 자금조달비용, 운영비를 식2)에 대입하여 대략적으로 ROA를 추정해 낼 수 있는데, 추정된 ROA는 약 -6.56%이다. ROA는 자산대비 손익이므로 자산을 얼마나 고갈시키는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대출자산의 6.58%가 해마다 마모된다면 기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추가적인 재원이 지속적으로 조달되지 않는다면, 미소금융의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저신용·저소득자들의 금융접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들이 성과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4.3. 해외 마이크로 크레딧의 경험과 새로운 균형

해외 마이크로 파이낸싱 금융기관들 중 프랑스의 ADIE, 독일의 DMI, 그리고 미국의 ACCION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소금융이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균형, 다시 말해 상업적 관점(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관점(신용공급)의 균형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프랑스의 ADIE

프랑스의 ADIE는 2011년 기준 28개의 지방사무국을 보유한 대표적 소액금융기관으로서 28개 지방 사무국과 46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심사에 285명, 사업개발에 92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재무, 경영학, 회계를 전공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금은 은행에서 1%로 조달하여 8%로 대출하고 있다. 운영비는 이자수익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데, 이자수익이 20%, 주정부와 기업의 기부금이 74%에 달한다. 이 운영비의 대부분은 창업지원서비스와 인건비로 사용된다. 창업지원과 컨설팅 등의 서비스는 ADIE의 핵심 사업분야인데 입지선택, 회계관리, 경영기법 등 2년간 총 15시간을 전문가와 심층 상담하고 월 1회 정기적인 만남이 차입자와 ADIE 담당자간의 이루어진다. 대출은 계단식 대출이 대부분이다.

특이한 점은 손실분담율인데, ADIE가 13%, 정부기금이 55%, ADIE에게 자금을 조달한 은행이 20%, 지역보증기금이 4%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ADIE는 상업은행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상업은행으로부터 1%로 차입하여 운용하고 난 뒤, 신용도를 얻은 고객들은 은행으로 연결된다. 즉 은행과 ADIE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며, ADIE는 국가와 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빈곤층의 초기 대출단계를 맡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독일의 소액금융연구소(DMI)

독일의 소액금융연구소는 회원금융기관을 두고 있는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에는 약 100명의 대출심사인력이 있으며, 회원사인 소액금융기관에게 대출표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2단계의 승인절차를 통해 소액대출심사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소액금융기관을 회원사로 승인하고 난 뒤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한 노하우 전수 교육을 실시한다.

소액금융연구소의 재원은 회원금융기관에게 받는 수수료와 회원비(35%), 주정부와 일반기업의 기부금(65%)로 이루어진다. 대출은 다른 마이크로 크레딧처럼 단계적 대출 형식을 취한다. 대출금리는 8.9%이다. 손실배분율은 회원금융기관에게 20%, 그리고 소액금융보증기금에게 80% 요구한다.

(3) 미국의 ACCION

미국의 ACCION은 25개의 현장사무소를 가지고 미국의 소액금융시장의 1/3을 차지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다. 정부지원금(20%), 민간기부금(50%), 자체 수익(30%)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역시 단계적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자율은 16%정도이다.

이러한 외국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1)적절한 대출상품과 컨설팅을 통해 차입자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관계금융), (2)복지적 지출을 대체하는 공공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정부지원이 유지된다는 것(공공성), (3)손실배분율을 적절히 설정하여 건실한 대출을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사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의 세 가지 특징을 공통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은 한국의 미소금융의 미래를 위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인 한국의 미소금융은 어떻게 새로운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관계금융적 성격의 강화이다. 단계적 대출과 컨설팅 등을 통해 차입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미소금융은 관계 금융의 핵심인 선별, 모니터링,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미소금융의 운영비가

전체 자산 대비 3.65%로 너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인력은 2015년 현재 50명 미만이다. 또한 2013년 6월 전국 164개 지점(기업, 은행, 지역지점 등 모두 포함)들의 총 인력은 680명인데, 이 중 비상암 및 감사를 제외한 근무인력은 437명으로 나타났다. 지점 당 평균 2.7명의 인력이 기금의 관리, 대출, 사후관리, 모니터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2013)). 물론 자원봉사자와 창업 및 경영컨설팅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실시되고 위탁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미소금융이 저신용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보다는 대출해 놓고 상환율만을 걱정하는 금융기관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배경에는 미소금융의 정치적 탄생과정과 철학의 부재와 더불어 비재무적 수단(컨설팅과 주기적인 관계를 통한 관리)의 부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공성과 민간부분의 조화가 필요하다.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사례들에서 우리는 재원의 조달 및 사후 손실책임을 모두 공공적인 성격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적인 성격으로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정 대출이자율이 형성될 수 없다. 실제로 MIX자료에 의하면 해외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은 25%가 넘는다. 따라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자금조달과 운용에 강화되고 그 반대급부로 대출이자율을 적정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사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대출관행이 자리잡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할 수 있다. 운영비와 연체율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입장이다. 이미 확인하였듯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서민대출은 운영비와 연체율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저신용자들에 대한 정보 취득, 사후관리, 컨설팅 과정을 치밀하게 수행한다면 운영비는 높아지지만 반대로 연체율을 하락하게 된다. 이는 NGO 형태의 해외 마이크로 파이낸싱 금융기관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대로 운영비 지출을 줄인다면 연체율이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연체율이나 운영비가 높아질 경우 모두 대출이자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대출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연체율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연체율과 손실율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소득 창출과 경제의 활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만약 운영비 지출을 줄이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을 대출이자율을 높임으로서 상쇄한다면 이는 대부업 모델이 될 것이다.

연체율을 줄이면 대출이자율이 높아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상업화적 논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이다. 시장에서 풀리지 못한 문제이므로 사회적 접근 내지는 복지적 접근 방식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보조금을 통해서 대출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이나 보증 방식을 적용하되 적절한 손실분담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IV. 결론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서 한국의 미소금융의 현황을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미소금융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신용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대

부업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ROA가 (-)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 미소금융이 관계금융적 성격을 강화하고, 공공적 성격과 민간적 성격의 결합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집(2013),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2013, 9, 11)
- 국회예산정책처(2013),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
- 금융위원회(2014),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원회(2015), 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금융위원회(2015), 2015년도 제1차 서민금융협회회 개최결과
- 박종현·장중익(2014),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조직모형과 한국적 시사점”,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2권 제1권
- 박창균(2013), 새로운 서민금융체제의 모색
- 신명호(2008), 한국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의 방향과 자활공동체의 과제
- 오윤혜(2013),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3-08
- 정영석·이기영(2013),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1호
- 한국금융연구원(2010),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 한국금융연구원(2012), 서민금융 지원체계개선방향
- Dieckmann, R.(2007), "Microfinance: an emerging investment opportunity: using social investment and financial returns", Deutsche Bank Research
- Lutzenkirchen and Weistroffer(2012), "Microfinance in evolution: an industry between crisis and advancement", Current Issues on Global Financial Market
- Manove, M.A., Padilla, J., and Pagano, M.(2001), "Collateral versus Project Screening: A Model of Lazy Bank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2
- Sengupta, R. and Aubuchon, C. P.(2008), “The Microfinance Revolution: an Overview”,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 Stiglitz, J. E. and Weiss, A.(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No. 3